

“빠~ 술 드셨네요”...집중단속 불구 음주운전 늘었다

코로나 끝나고 연말연시 맞아 기승...광주경찰 단속 강화
12월 1~1월 4일 420건 적발...경찰서마다 하루 2~3건
음주 교통사고는 줄어...오후 8시~새벽 2시 40% 죄다 발생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 기간인 지난 9일 밤 11시 10분께. 40대 운전자 A씨는 광주시 서구 유촌동 무진교 일대와 계수교차로에서 차를 잠시 세웠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A씨의 차량 안으로 음주감지기를 집어넣자 날카로운 ‘빠’하고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다.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셨다는 A씨는 “얼마 마시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붙자 적색불이 들어왔고,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를 넘겼다. A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 조치시켰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연말연시에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경찰서마다 하루 2~3명 꼴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나온다. 연말 연시에는 그 수가 더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에서는 동부경찰 2명, 서부경찰 2명,

남부경찰 3명, 북부경찰 2명 등 모두 9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연말연시 진행하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420건(취소 274건, 정지 1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384건→420건, 36건) 증가했고 1일 평균 12건이 적발되고 있다. 주간(오후 2시~오후 4시)에도 총 5차례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취소 1건, 정지 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5%(40건→38건) 줄고, 부상자도 10%(70명→63명) 감소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광주시 북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에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 음주 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39.5%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새벽 2시~오전 6시 21.1%, 오전 6시~낮 12시 15.8%, 낮 12~오후 18시 15.8%, 오후 18시~오후 20시 7.8% 순으로 집계됐다.



10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무진교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날씨가 예년에 비해 따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연말연시 차량 이동량과 술자리 모임, 회식이 늘어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식당·유흥가 인근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할 방침이다. 아침 숙취운전 단속은 물론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들의 음주운전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2주기...철거작업 한창

상가 7곳과 보상 합의 과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2주기를 맞았으나,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10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철거 및 재시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철거 작업은 101동 37층 중 12개 층, 102동 28층 중 4개 층, 103동 38층 중 10개 층, 104동 37층 중 9개 층, 201동 39층 중 9개 층, 202동 28층 중 7개 층, 203동 38층 중 12개 층 진행됐으며 204동은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철거 및 재시공 작업은 당초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철거 범위가 주거부 부분 철거에서 지상부 전면 철거로 바뀌면서 완공 시점은 미뤄진 상태다. 관할청인 서구에 추가 철거작업 인허가를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붕괴 사고 주변 상가 피해 보상도 10일 기준 피해 상가 87곳 중 7곳(6명)과 피해보상안을 합의할 못 이룬 상태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미합의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고 유족들은 남은 과제로 책임 있는 철거-재시공 공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호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인

“공사를 빨리 끝내는 데 급급하지 말고, 그렇다고 민원인을 핑계로 공사 기간을 늘어뜨리지도 말고 제대로 해체 및 재시공을 하길 바란다”며 “붕괴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감시 및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또한 철거-재시공 이후 현장에 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수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3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브로커’ 수사 현직 경찰 2명 추가 영장

‘사건 브로커’를 수사중인 검찰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현직 경찰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남 목포 경찰 소속 A 경정과 같은 경찰서 파출소 팀장 B 경감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위해제 상태인 이들은 전직 경찰 C경감(구속)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전 경감이 이를 사건브로커 성모(62)씨를 통해 지난달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

진 채 발견된 D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D치안감 재직 당시 성씨를 통해 인사청탁한 전남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광주지법에서 11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사기결혼 5억700만원 뜯어낸 유부녀 징역형

광주고법 3년 6개월 형량 유지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고,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아파트와 다른 주택도 가지고 있어요.” 유부녀 A(38)씨는 지난 2017년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한 남성에게 접근했다. 지난 2015년 결혼한 A씨는 미혼으로 행세하면서 이 남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재력을 자랑했다. 자녀까지 있는 A씨는 자신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것도 없을 뿐더러 한국무용 교수도 아니었다. A씨의 목적은 결혼을 핑계삼아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다. 남성을 속여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만 월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빼돌리겠다는 것이 A씨의 계획이었다. A씨는 남성을 속이기 위해 지말했다. A씨는 가짜 어머니를 고용해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까지 동원해 결혼식까지 치렀다. A씨에게 속은 남성은 신혼집 구입과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5억 700여만원을 송

급했다. 결혼식 축의금도 모두 A씨가 가져갔다. A씨는 모든 돈을 유혹비로 탕진했다. 남성은 A씨를 철석같이 믿고 아버지 재산까지 팔렸지만 이조차 모두 다 사용해 버렸다. 남성은 “부친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금이 많으면 연금액수가 줄어 드니 당신(A씨)명으로 1년간 은행에 정기예탁을 해달라”고 하면서 5000만원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중 1000만원을 친동생 차량 구입비로 쥐버리고 4000만원을 써버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A씨는 피해 남성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을 들어 형이 과도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은 풀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부 변제를 했더라도 전체 피해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